

출·재가 포교전문가 한자리에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 30일 출범... 단장 계성 스님

포교원력 하나로 현장을 누벼왔던 나홀로 포교전문가들이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4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회 개설 취약 분야의 포교활성화와 포교신도단체의 교육 및 조직화를 위한 법사 조직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출범을 발표했다.

전법단(승가), 전법지원단(재가), 전문법사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당연직 총재를, 포교부장 계성 스님이 단장을 맡는다.

승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법단은 계층별, 직종직능별, 포교 사각지대에서 주체적으로 법회활동을 하는 스님 100여 명으로 조직됐다.

지원단은 재가지도자 중 설법, 법회 지도 능력을 갖춘 재가지도자 중 법회지도 능력을 갖춘 200여 재가지도자로 조직됐다. 전문법사는 포교 영역에서 학덕과 명망을 갖춘 스님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계층별 지역별 법회에서 활동하는 스님의 명단을 확보해 법사인재풀 형성, 계층별 지역별 전법단 구성, 행정지원 사무처 포교원 포교팀에서 전법단 법사와 법회 현장 연결 및 지역 전법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혜총 스님은 "지금까지 배출된 인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8일 제주 관음사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불자 포교결집대회·제주불교 중흥 대법회를 봉행했다.

재들을 조직화해 필요로 하는 곳곳에 적재적소적시에 파견함으로써 원활한 법회 진행을 하도록 돕게 된다"며 "포교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전법단 구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포교원력을 가진 1000여 명 구성을 목표로 전법단이 구성돼 손길이 닿지 않은 곳곳에 포교역량이 미치지 않으면 포교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행·직장직능 단체, 어린이 법회, 군법당 등 법회를 하고 싶어도 법사가 없어 원활한 진행을 못한 곳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도소별 교정교화, 군법사 부재 군법당의 법회주관 및 지도, 경승과 연계한 경찰서법 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청소년, 체육인, 공무원, 새터민, 이주민, 장애인 등 포교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은 전법단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했다. 현장, 사찰, 법회 중심의 포교활동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전법단은 기존 포교 신행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문화된 포교 영역을 포교원의 지원으로 넓혀나가기로 하는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 산하기관인 포교사단에서 배출한 1만 포교사 중 전문 포교사 150명은 포교사단 내에서 전법지원단을 구성해 수시로 파견하게 된다.

전법단 출범식은 4월 3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18일 제주 관음사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제주불자 포교결집대회·제주불교 중흥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상연·박선주 기자

법령 명칭 변경 사유재산서 사후 개인재산으로

조계종이 시행중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법'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법'으로 명칭 변경됐다. 종단에 한했던 재산 수증처와 기금 운영 절차를 다양화하고 집행범위를 사망으로 한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4월 22일 제24차 총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종령의 명칭 변경은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종단 출연 시점을 사후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수증자를 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 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내 법인으로 하고, 기금운영절차도 유지재단, 교구본사, 사찰, 법인으로 확대해 수증된 재산이 승가복지와 승려 교육기금으로 폭넓게 운영되도록 했다.

현재 유언장, 사인증명서, 약서, 증여계약서로 번잡했던 서류 절차를 자필 유언장 1부(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분한 신고 기간을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총무부 박종화 팀장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된 종령에 의거해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조계종은 사유재산령과 관련한 제2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중정 법전 스님은 23일 해인사에서 일적 후 재산을 조계종유지재단에 출연한다는 친필 유언장을 작성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청와대 오찬 "천안함 희생자 애도 방안 강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1일 청와대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7대 종단 오찬간담회에서 "천안함 관련 희생자를 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솔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조언도 이번 일에서 뿐만 아니라 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슴에 지니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임윤길 천도교 교령,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희중 천주교 대구교구,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토론회 '아슬아슬'

4월 18일 일요일에 봉은사 명진 스님은 "만약이라도 봉은사에서 새로운 불교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내 몸이 피·고름 묻히더라도 종단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든 행위를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1일 일요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자승 스님의 이명박 대통령 선거활동 의혹에 관해 "자승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견배를 했던 것은 힐튼호텔이 아니라 롯데호텔이며, 시기도 대선 직전이 아니라 1년 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진 스님의 거듭된 문 제성 발언에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봉은사가 수용함으로써 봉은사 토론회는 예정대로 30일 개최될 전망이다.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 실무자들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18일 일요일에 발언과 봉은사가 최근에 발행한 <판전> 4월호 내용 등이 "폭로와 의견표출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3자간 합의를 다시 저버린 것이라는 항의를 중심으로 3자간 입장개진이 있었다.

총무원과 불교단체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 조치가 봉은사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과 불교단체는 △4월호 <판전>의 전장 회수 폐기 △다가을 일요일에 일체의 비난 폭로 중지 약속 이행 △약속파기

에 대한 명진 스님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은 "25일 일요일에 열린 실무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불교계 언론인 "김영국"이 동관과 직접 통화했다"는 4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김영국 조계종 홍보부 사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봉은사는 통보 당시 "VIP가 언급됐다"며 MB개입설까지 제기했다.

이에 앞선 20일 조계종 홍보부(부장 탁관)는 봉은사에 <판전> 4월호 회수 및 폐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홍보부는 공문에서 "<판전> 4월호에 게재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특집 기사의 내용이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견 개진을 넘어 종단의 합법적 절차를 부정하고 우통함은 물론이고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을 악의적으로 비방·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남(대원)·안승기(우보)·이차갑(선호)·전봉수(무구)·정창현(명적)·조선환(진각) 등 봉은사 신도회 역대회장 6명은 20일 성명서에서 "토론회 준비가 진행중인 11·18일 일요일에 명진 스님의 행위는 영암 스님의 큰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명진 스님은 공개참회하고 봉은사를 떠나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선출

선문 스님 선관위에 이의제기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제26대 주지에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동화사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선거인단 291명 중 263명이 투표해 성문 스님(달성 용연사 회주)과 선문 스님(대구BBS 총괄국장)이 각각 129표를 얻었다. 5표는 무효였다. 두 후보 득표수가 동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라 주지는 승률이 많은 성문 스님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선문 스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선문 스님은 "선거결과에 승복하

고 싶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중앙선관위에 △본인 입회자의 김표 △중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을 산중총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산중총회 의장(본사주지)의 선거 결과 공포의 정당성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문 스님은 중앙승가대 1회 졸업생으로 석주 스님을 모시고 중앙승가대 설립을 주도했다. 1980년 전국 청년승가회 사무총장 1983년 비상종단운영회의 상임위원과 서울 봉은사·안양 염불암 주지, 제10-12대 중앙총회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손범천 대구지사장

영통사서 남북 합동법회 합의

21일 개성서 천태종·조불련 실무회담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성 영통사에서 남북 합동법회가 봉행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4월 21일 개성공단 내 한 음식점에서 남북합동법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회의에는 남측 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천태종 관계자와 북측 조불련 차금철 포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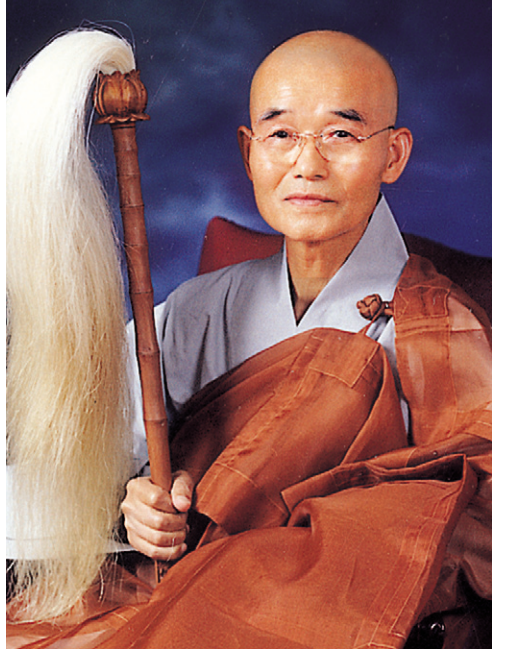
이날 남북 불교계는 5월 10-15일 중으로 '조국통일 기원 부처님오신날 북측 남북(북남) 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개최 날짜와 참가 인원은 각 국 정

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기로 했다. 합동법회에서는 남북 대표 연설과 남북 공동발원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3일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소유 부동산을 전면 동결하고, 민간 관리인원도 전원 추방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남측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측의 무력행사 때문일 것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남북불교계의 합동법회 봉행 합의는 개성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불교계가 민족 화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남겼다.

조동섭 기자

혜암당 성관 대종사 탄신 91주기 추모법회 및 「가야산 정진불」 출판 봉정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탄신 91주기 추모법회와 큰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가야산 정진불」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5월 5일 (음 3.22)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해인사 원당암
 - 문 의 : (055)932-7308
- *오후 2시에는 문도회의를 개최하오니 문도스님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법합장
원당암 감원원각